

統一情勢分析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2004. 3

최의철(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요 약>

- 미 국무부는 2003년도 북한인권실태를 포함한 2004년도 각국 인권 보고서를 금년 2월 25일에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2004년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결의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예정되고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베이징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음.

-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에게 인권실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등 지역 불안정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음.
 -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수용소 및 구금시설에서 고문, 강제낙태, 유아살해 등 가혹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함.
 - 또한 합리적인 경제운동과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채택된 2002년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생필품과 원자재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하였고 극심한 인플레이와 주민들의 불평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함.
 - 이 보고서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의 하나라고 규정함.

- 그러나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탈북자, 미확인보도 등으로 기술하고 있어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보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짐.

-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숫자는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됨.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미국 조야는 시민단체와 주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 미 의회는 2003년 11월 상하원이 각각 ‘북한 자유법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금년도에 상하원 단일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미 의회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등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 민주주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작년도 제59차 북한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의 이행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년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결의안을 재차 채택하여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

- 정부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불참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초래 하였는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정부는 대안으로 금년에는 기권이나 찬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기권하는 경우에 정부는 입장 설명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함.

- 이러한 입장 표명은 향후에 전개될 다자간 틀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를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2
1. 주요내용	3
2. 종합평가	10
III.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움직임	12
IV. 우리의 고려사항	14

I. 문제 제기

-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카터 행정부 때(1977년)부터 매년 각국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북한인권실태가 포함된 2004년도 보고서는 금년 2월 25일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에서 발간하였음.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고되고 있음.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디펜스 포럼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미국 조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고,
 - 시민단체의 운동에 부응하여 2003년 11월 미국의 상하원은 탈북자들을 미국에 수용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2004년 2월에 영국 BBC 다큐멘터리 ‘악에의 접근’과 일본 후지 TV의 요덕 정치범수용소 영상 방영 및 정치범에 대한 생체해부 실험 설 등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2004년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함.

II.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권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고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미 국무부는 매년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음.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인권규약 중 B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바,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서의 내용은

- 전문
- Section 1: 신체적 자유 등 개인의 존엄 존중
- Section 2: 자유권 등 시민적 자유의 존중
- Section 3: 정부 교체의 권리 등 정치적 권리의 존중
- Section 4: 국제인권 및 비정부인권기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 Section 5: 인종, 성, 종교 및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 Section 6: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및 인신매매 등 노동권 등임.

1. 주요 내용

가.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특성

○ 2003년 보고서와 유사하게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는

-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실질적인 최고통치자로 군림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명목상의 국가수반임.
- 선거는 자유롭지 못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주체이념은 국가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음.
- 북한은 가장 군사화 된 국가이고 군과 경찰 등 보안기관들이 대내외 안보를 담당하고, 이들 보안기구들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은 심각한 실정임.
-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주민들의 비공식적 부문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

○ 2004년도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북한당국이 2002년도에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임.

- 식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거 식량, 의복 및 에너지 등의 국가 배급체제를 보완하고 장마당을 공식화하였고,
-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임금과 물가의 급격한 인상, 원화 가치 절하 및 기업소 지배인의 책임 등을 강화하였으나,
- 결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음.

- 또한 2003년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북한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인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북한당국의 지도층은 국제인권규범들, 특히 개인의 자유권을 당과 정부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것이며 불법적이고 외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사실을 보고하고 있음.

나. 항목별 내용

(1) Section 1 관련 사안

- 개인의 존엄권과 관련, 북한당국이 2001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수를 33개에서 5개로 줄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 이 중 4-5개 범죄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넓은 의미의 법 적용이 가능한 정치적인 범죄이며.
 - 엄중한 인권 침해 사례로 2003년도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감옥에서의 출산이 금지되고, 수감자에 대한 강제 유산 및 영아 살해는 교화소의 기본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임.
- 행방불명과 관련, 북한당국이 납치한 일본인 중 5명이 일본 방문 이후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체류 중인 것은 변함이 없고 8명이 사망했다고 2003년도에 보고했으나,
 - 금년도 보고서에서 일본당국은 사망하였거나 북한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일본인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답을 촉구하였으며, 납치된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20여명에 대한 북한당국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등 일본인 피납자 수는 북한의 주장보다 많은 것으로 주장함.

○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와 관련, 금년도 보고서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여성들에 대해 강제 유산과 출산 금지 조치를 취하고 출산아동에 대한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의 출산을 금지시킨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위생시설은 대단히 열악하여, 목욕이나 세탁을 거의 할 수 없고 몇 달 동안의 구금기간에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을 지적함.

○ 임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과 관련, 이미 알려진 사실로 약 15-20만 명이 정치적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 금년도 보고서에서 이들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 실시로 3대에 걸친 가족이 투옥되고 무기한 강제노동에 처해진다는 NGO의 조사 결과를 보고함.

- 또한 북한당국은 국가 유공자 이외의 신체장애자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차원은 아니더라도 국내 추방(도시에서 시골로)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 헌법은 법에 의해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또한 공식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와 이의 적용에 대한 정보

는 제공되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과 경미한 범죄에 이외의 재판에 대한 참관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

- 공개재판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투명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사생활,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북한당국의 임의적인 간섭과 통제는 엄격히 실행되고 있고, 학교, 직장 등에서 사상 교육은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2) Section 2 관련 사안

○ 헌법이 언론, 표현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규범,’ ‘집단주의 정신’ 등을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언론의 자유 및 모든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 특히 외국 기자들도 행동을 감시당하며 거리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방문 기간동안 휴대폰은 몰수당한다고 기술함.

○ 북한 내 종교 활동에 대해서 금년도 보고서는 최근 남한과 미국을 포함한 종교 사절이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가 늘고 있으나 그들 중 일부는 북한의 종교 활동이 가식적인 것으로, 일부는 진정한 종교 활동으로 간주하는 등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특이 사항은 이들 외국 대표단들이 평양에서 예배를 볼 경우에 관광버스를 타고 집단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목격

되어, 이들의 평가가 피상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이동의 자유, 특히 외국 여행은 정권에 절대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특권의 하나임.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탈북자에 대해 최고형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매년 늘고 있음.

- 2003년도 보고서에서 13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주재 외국공관을 이용해 남한으로 망명이 허용되었고, 2004년도 보고서에서는 1,500명이 주로 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하였고(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 탈북자는 1,139명, 2003년도 탈북자는 1,281명임),
- 이에 중국당국은 탈북인들을 보호하는 종교단체들에게 탈북자 보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결과를 경고하였다고 기술

(3) Section 3 관련 사안

○북한에서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김정일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과 인민군대를 통해 정치체계를 지배하고 있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우수성, 민족주의와 주체 이념에 호소하고,
- 각종 선거에서 노동당이 추천한 인물들이 100% 당선되고 있고,
- 자유선거는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선전하는 풍토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4) Section 4 관련 사안

-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거부하고 있고,
 - 2001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제2차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보고는 정부 전복을 노리는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의 선전이라고 주장함.
- 북한당국은 2001년부터 유럽연합(EU)과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토의하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함.
- 금년도 보고서는 식량 배분에 대한 투명성 보장문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206개 군 중 162개 군을 방문하여 식량 분배와 식량의 필요성을 조사하였고,
 - 남한도 식량지원분 10만 톤당 3개의 모니터링 팀을 남북이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 파견하여 식량분배 상황을 처음으로 점검하였다는 것임.

(5) Section 5 관련 사안

- 2003년 보고서와 같이 헌법에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극심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2004년도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 관한 것임.

-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 당과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최고인민회의에 여성이 20%를 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는 약 4%만이 진출하고 있음.
- 어린이의 건강문제와 관련, 1998년 UNICEF/WFP 조사 때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감소로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2002년도의 4백만명에서 2003년도에 3백만명으로 감축하였음.
- 2002년도에 UNICEF, WFP와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표본 6,000명의 어린이 중 20%가 표준체중미달(underweight), 39%가 만성영양실조(stunted), 그리고 8%가 급성영양실조(severely malnourished)로 나타났음.

(6) Section 6 관련 사안

○ 노동권의 항목에서는 결사의 권리, 단체행동 및 교섭권, 아동문제 및 인신매매 등을 다루고 있음.

- 추가 사항으로 북한당국의 관리들은 외국 기업의 책임자들에게 북한에는 사용자 측에 대해 노동자의 '폭동, 파업 및 의견대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
- KEDO에서 일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월 \$110이나, 남한과 경계에 있는 공단(개성공단)의 임금은 시간 당 \$0.26로 책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음.(KEDO의 약 절반 수준임)
- 2003년도 보고서와 같이 여성과 처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지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2. 종합평가

- 미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는바,
 - 미 국무장관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중국,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이 엄격한 정보 통제와 전체주의적 압제를 실시하고 있고,
 -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르는 주체가 바로 북한당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2004년도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 동안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는바,
 -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수용소 및 구금시설에서 고문, 강제낙태, 유아살해 등 가혹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 북한 지도층은 국제인권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를 당과 정부의 목적에 반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 법에 의하지 않는 살해, 행방불명, 임의 구금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짐.

-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할 경우에 그 신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

으나, 미 국무부 보고서는 탈북자 또는 미확인보도 등 정보원을
막연히 기술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 떨어짐.

-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입국숫자는 착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7쪽 참고).

Ⅲ.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움직임

- 2003년도에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 및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수용 등 인권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음.
 - 미국의 디펜스포럼은 황장엽을 미국에 초청하여 조야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로비에 적극 활용하였고, 탈북자들의 의회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였음.
 -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로비단체인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Concerned Women for America)’은 북한의 고위 공직자 및 과학자들의 탈북을 지원하는 ‘세이프 하버 프로젝트(Safe Harbor Project)’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 미국 시사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어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킴.

- 2003년 10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는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를 발표하여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소 및 구금시설의 열악한 실태를 소개하였음.

- 이와 같은 여론을 배경으로 미국 의회 내 한국문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코커스(caucus)’회원 50여명이 중심이 되어 2003년 11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수용(1년에 2만 명 이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제출하였음.
 - 상원은 ‘2003 북한자유법(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을, 하원은 ‘북한자유법(North Korea Freedom Act)’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이 법안이 상정된 배경 요인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 민주주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바,
-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의 타협을 거쳐 단일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부시 행정부는 이를 환영할 것임.

○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지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던바,

-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우방국들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더불어,
- 미국 내 NGO들의 관심 고조와 미 의회의 탈북자의 미국 수용 및 북한의 자유화를 유도하는 법안 제출 등으로
-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여론을 주도하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IV. 우리의 고려사항

-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 하는 등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보임.
 - 미국은 김정일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접근하면서 인권을 매체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 북한 핵관련 6자회담에서 켈리 미 대표는 북한 핵과 재래식 무기 문제등과 함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을 압박하였고,
 - 또한 EU 등 우방국들은 북한의 안보와 인권,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과 인권 개선 요구 등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병행모델을 견지하고 있음.

-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대변인(2004.2.28)은 미국이 ‘인권재판권’ 행세를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인권문제를 연계시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 압살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북한 내 인권실태의 악화로 대외적으로 큰 설득력이 없음.

- 또한 EU, 미국 및 유엔 관계자들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결의안의 내용을 북한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2004.3.15-4.23)에서는 더욱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 채택할 것으로 보임.
 - 2004년 2월 4일 북한당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결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 2003년 5월과 9월에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방문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북한당국의 회신이 없으며,
 - 2002년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증진 특별보고관, 종교적 관용 특별보고관 등의 방북 요청에 아직도 회답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3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폐막된 제5차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국제NGO 대표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탈북자 보호 문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미국 의회에 상정된 북한 자유법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면서,
-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유엔이 토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등 및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의 대북인권정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북한의 인권남용을 묵인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을 면할 수 없는바,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표결에서 적어도 기권 또는 찬성함으로써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여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획득해야함.
- 기권할 경우, 정부 입장 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과제가 되고 있어 앞장서기 어렵다는 점을 국

제사회가 이해하도록 촉구함.

-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점과 유엔 등 다자간 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고,
- 이와 관련, 국내외 민간인권단체(NGO)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재정을 지원하는 등 막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정부 및 관련국들과 이 문제의 대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